

與 'UAE 의혹 제기' "국익 자해행위"

한국당 국정조사 요구에 "미몽에서 깨어나라"... "문재인 정부 관련 없어" 해명에 자신감도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이 입증 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에 대해 잇따른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국익 자해행위"라고 역공세를 취했다.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안이 문재인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자신감도 밝히는 분위기다.

우원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국당은 원전에서 시작해 근거가 미약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그 책임을 무리하게 문재인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미구 잡이식 잇따른 의혹 확대는 국익 자해행위이고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국방, 군사 등 민감한 양국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전보다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악용해서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며 "더구나 UAE 고위급 관계자의 방한을 두고도 연일 벌어지는 폭로가 양국 관계를 어디까지 악

화시킬지 고려도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문제는 양국간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국가간에 풀어나가야 한다"며 "야당의 무책임한 무한정 의혹 제기는 국익을 크게 해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당은 더이상 무책임한 의혹제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제발 미몽(迷夢)·꿈을 꾸거나 무엇에 홀린 듯 정신이 맑지 못하고 얼떨떨한 상태에서 좀 깨어나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여당 의원들도 이번 사안이 "현 정부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UAE 원전과 관련해 이면계약이 있었느냐 또 군사분야의 지원 내용 군사지원 협정과 관련된 얘기, 핵폐기물에 관한 의혹 등등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 형

국이 바뀌는 국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사안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임 실장의 방문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 아니다"라며 "출범한 지 5~6개월만에 큰 외교문제가 생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의 핵심관계자 역시 "청와대에서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한 것 같지. 과거 정부를 파헤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중대 정의당 의원은 임 실장 특사 방문을 두고 "(한국과 UAE간)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것을 거의 확인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비밀 양해각서와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볼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고 무리한 약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원전 수주 당시 UAE

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며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 번 맺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하고 맺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외의 기준을 받지 않는 조약이 아닌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단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는 물론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 이어서 결국은 양국이 서명하지 못하고 발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방부로부터 체결 시기와 명칭 등은 못 받았지만 체결된 사실과 문제가 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임 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 "양국간의 신뢰 문제의 경보가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그것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해석했다. /뉴시스

국민의당 최고위, "당원 결정 안따르면 직무유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진행 중인 바른정당과의 통합 절차에 관한 정당성과 당내 현안 해결을 위한 제언 등이 쏟아졌다.

국민의당 최고위원들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당원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한철수 대표도 반대파에 무릎꿇어서라도 설득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김관영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당원들이 결정할 것을 당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듯 국민의당 주인은 당원이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오게 돼 있다"며 "당원에 의해 선출된 지도부는 임기 동안 잠시 권력을 위임해준 당원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 민주주의는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시작하고 완성된다. 오랜기간 정치해온 중진의원들이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인 전당원 투표를 매도하고 투표 거부운동을 벌인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참여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통합여부를 최종 결정하려는 전당대회 역시 모든 대표당원들의 참여 속에서 치러져야 한다"며 "당원당규에 따라 진행될 전당대회까지 불참하거나 무산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뉴시스

박근혜 추가기소... '특활비 40억 뇌물' 혐의로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관련해서 이르면 금주 중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40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자금의 사용방식과 이동경로 등을 대체로 파악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문고리 2인방이라 불렀던 인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은 자신들이 '배달책'에 불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돈을 건넨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일부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상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태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검찰은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자금의 사용 방식과 흐름 등에 대한 파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찾은 서울중앙지검 양성조 특수수사팀에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에 나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사실상 혐의 내용이 대부분 공개된 상태여서 더 이상 기소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가기소에서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한인마을 이권 개입 등 또다른 의혹과 혐의는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단 국정원 상납 관련 혐의만으로 추가기소한 뒤 이후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벌여 기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검찰은 국정원 자금 관련자들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하지 않고 이후 순차적으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특활비의 용처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확인을 하지는 못했다"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집할 수 있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수사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동원해 용처를 추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강경화, 틸러슨에 남북회담제의 설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우리 정부가 남북회담 회담을 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두 장관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북한 신년사 평가를 포함한 북한 동향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 간 빈틈없는 공조를 토대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강 장관은 다음 달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해 나가자 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을 의미 있는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더욱 빈번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반도 관련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북핵·북한 관련 정책공조와 조율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당국이 시급히 민발 수 있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지난 2일 정부는 북한에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뉴시스



3일 전주 오벨리스퀘어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년인사회에 이춘석 사무총장, 김춘진 도당위원장,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및 참석자들이 손을 들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새로운 전북의 도약을 위해 지방선거 압승하자"

민주당 전북도당 신년인사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신년 인사회를 열고 지방선거 압승을 다짐했다.

3일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주의 한 웨딩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새로운 전북의 도약을 위해 한 마음 한뜻을 모아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이춘석 국회의원과 송하진 전북지사, 황현 전북도의회 의

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고 새해 덕담과 지방선거 승리 염원 떡 나눔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춘진 도당 위원장은 "충북정신을 실현해 정권교체를 이루고 첫 번째 새해를 맞았다"며 "올해가 전라도 천년인만큼 새로운 천년이 돼 발을 내딛는 초석을 이 자리에서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의 당원동지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켜 9년 만에 집권여

당이 되었다"며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공항 등 그동안 터덕거렸던 전북한인이 한방에 해결됐다"며 "정세균 국회의장, 이춘석 사무총장 등 전북출신 인사 등이 중앙에서 역할을 해줘 전라북도들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한 학교엔 행복은 교육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은수, 박민지)은 호지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